

일본의 'GX 추진기구' 설립·운영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서대훈 (kdb14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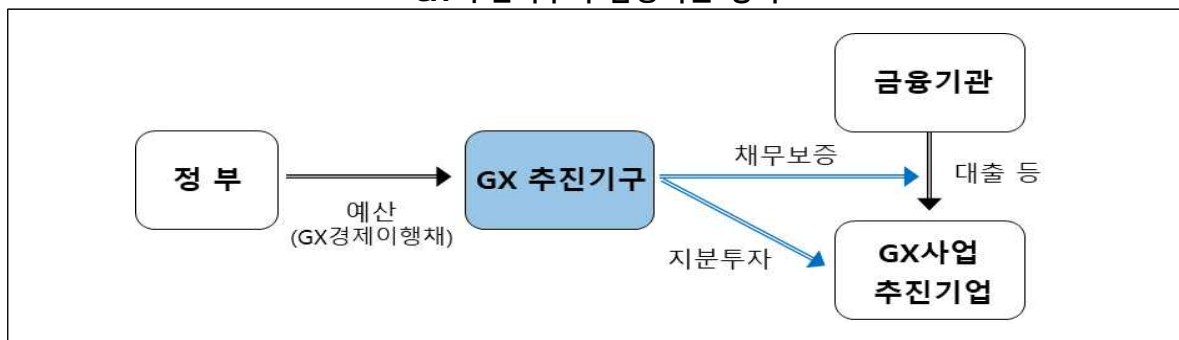
- ◆ 일본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대규모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서 'GX 추진기구'를 설립·운영중
- ◆ GX 추진기구는 정부의 GX전략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에 중요한 주요 1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(채무보증, 지분투자)을 확대해 나갈 예정
- ◆ 국가경제의 중요 기간산업인 철강, 화학 등의 선제적인 저탄소 전환이 중요한 시점에 따라, 일본은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체계를 기반으로 전환금융 적극 지원중

□ 일본은 향후 10년간 150조엔의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서 경제산업성 주도로 'GX 추진기구(Green Transformation* Acceleration Agency)'를 설립('24.5월)하여 업무 개시('24.7월)

* 일반적으로 Green Transition(녹색전환)이라고 표현하나, '탈탄소' 뿐만아니라 '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'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만들어낸 일본의 조어임

- (업무범위) ①금융지원(채무보증, 지분투자, 회사채 인수), ②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('26년), ③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으로부터의 화석연료 부과금* 징수('28년) 등의 역할 수행
- * 화석연료 부과금 =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CO₂ 배출량 × 부과금 단가 (단, 금액의 상·하한은 별도 설정)
- 금융지원의 경우 ①정부 전략과의 부합 여부, ②GX추진 기여 여부, ③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보완하는 사업 여부, ④지속가능사업 여부, ⑤적절한 경영·추진체계의 설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준 충족시 해당사업을 지원

GX 추진기구의 금융지원 방식



자료 : GX推進機構 홈페이지

- (자금조달) ①「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(GX경제이행채)*」 발행(20조엔)에 따른 정부의 출자금과 ②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수익 및 ③화석연료 부과금 징수로 자금을 조달하며, 경제산업성을 통해 연간 예산으로 승인받아 사용

- 경제산업성의 예산안('25년)을 살펴보면, GX경제이행채 발행액은 정부의 GX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그 중 일부가 'GX 추진기구' 앞 출자금 및 사업예산으로 할당
 - * 10년간 총 20조엔 범위내에서 국회 의결로 발행하며, 국제표준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기후채권 인증 획득중으로 '24.2월~'25.1월까지 5년물 및 10년물로 총 3조엔 발행료
- GX경제이행채의 상환은 'GX 추진기구'의 화석연료 부과금('28년)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점진적 도입에 따른 유상할당('33년) 자금으로 할 예정
- (기타) GX 추진업무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'글로벌 자문단회의'나 '지역 데스크'를 설치하여 운영중
 - GX추진 관련 전문적인 조언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, 국제적인 기관*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자문단회의('25.1월)를 구성
 - * ICMA(국제자본시장협회),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, CDP(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), CBI(기후채권 이니셔티브) 등
 - 또한,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의 GX 실현 목적으로 홋카이도* 데스크를 설치('24.9월) 하여, 지역의 정보수집 및 사업 안건 발굴 등 실행
 - * 재생에너지, 수소, CCS 등의 유망지가 많아 '24.6월 정부로부터 'GX금융·자산운용특구'로 지정됨

□ GX 추진기구는 정부가 기설정*한 주요 1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검토

* '23.12월 경제산업성은 GX추진을 위한 '분야별 투자전략'을 수립

- 정부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한 에너지전환, 운송 수단(자동차, 항공기, 선박 등) 등 탄소배출량 감축에 영향이 큰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
 - '24.7월 설립되어 금융지원 기준 설정, 인재 채용 등 조직 정비로 인하여 아직 구체적인 사례나 지원액 등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

GX경제이행채에 의한 투자 촉진안

구 분	주요 내용	민관투자
① 철강, ② 화학 ③ 종이펄프, ④ 시멘트	제조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(혁신전로, 분해로 열원의 암모니아화, 케미컬 리사이클, CCUS 등)	8조엔 ^{주)}
⑤ 자동차	전기차(승용차, 상용차) 도입 지원	34조엔
⑥ 축전지	생산설비, 정치용(定置用) 축전지 도입 지원	7조엔
⑦ 항공기	차세대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	4조엔
⑧ 지속가능항공유	지속가능항공유(SAF) 제조 및 공급망 정비 지원	1조엔
⑨ 선박	무탄소선박 등의 생산설비 도입 지원	3조엔
⑩ 건물	가정 및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 개보수, 고효율 급탕기 도입	14조엔
⑪ 자원순환	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	2조엔
⑫ 반도체	파워반도체 등 생산설비 도입, AI반도체 등 기술개발 지원	12조엔
⑬ 수소	수소 등의 공급거점 정비	7조엔
⑭ 재생에너지	태양전지, 부유식 해상풍력, 수전해 장치 공급망 구축 지원 등	31조엔
⑮ 원자력	차세대 혁신로 개발 건설	1조엔
⑯ CCS	CCS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지원	4조엔

주 : 철강 3조엔, 화학 3조엔, 종이펄프 1조엔, 시멘트 1조엔

자료 : 經濟産業省(2023), "分野別投資戦略" 재구성

- 금융지원 방식으로는 지분투자 보다 채무보증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, 업무방법서상 보증은 보증기금으로 할당한 금액의 10배 한도로 지원 가능
 - 목표 민관투자액(150조엔)은 GX이행채 발행액(20조엔)만으로는 달성이 불가하여,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'GX 추진기구'의 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추정

□ 일본은 기존 산업의 탄소감축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환 금융을 적극 지원중

- 탄소 多배출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나,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하여 민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특성상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
 - 철강, 화학, 시멘트, 자동차 산업 등은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산업인 동시에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선제적인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
 -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(기술, 산업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체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립
- 기수립된 녹색전환 전략에 따라 정부사업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'GX 추진기구'라는 전담기구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·정부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방향을 구축·지원중